


견정언 리포트

공사비 산정기준의 작성 및 관리의 개선을 통한 공생 발전방안

민간참여·DB화 통해 산정기준 투명성 확보

1. 연구배경과 목적

경기침체에 따른 공사물량의 감소, 저가 하도급, 공사비 감액 등의 불공정 행위 만연으로 인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가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실제 소요보다 과소 계상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에 의해 작성된 예정가격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의 존립 위기와 적정공사비 미 확보는 공생 발전을 통한 건설산업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정 공사비에도 미달하는 싼 가격에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담을 전가하여 해소시켜 줄 전문건설업체만이 필요하므로, 전문건설업체의 기술력이나 생산성 향상과 애로사항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와의 장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립(Confrontation)'을 축으로 한 종래의 비즈니스 관계를 '협력(Cooperation)'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링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기 힘들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가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와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생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의 공사비 산정기준과 이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상의 문제점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등 공사비 산정기준과 그 관리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절차 상에서 공공 발주기관 등 정부의 의견은 중시되고, 건설업계의


홍 성 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실무협의회 정례화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객관화

실적 단가집·표준품셈 대·소형 공사 별도 발간

의견은 간과되는 경우는 많아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건설업계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심의 위원회(그룹·종합)의 심의과정에서 개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심 위원과 국토해양부 및 공공 발주기관 소속 심 의위원이 10~1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건설업계 소속 심의위원은 2~3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국토해양부 및 공공 발주기관 소속 심의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에 관한 심의과정에서 건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는 크지 않다.

둘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작성기준 및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사비 산정기준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실적공사비 단가 작성과 표준품셈에 관한 현장실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산정기준의 신뢰성을 저하시

키고 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산정 시 이용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만을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현장실사 및 실적공사비 산정 시 이용된 공사비의 자료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셋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소규모 공사에 관한 작업조건 보정기준이 매우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의 공사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예정가격 산정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3.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의 개선방안

공생발전의 전제조건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사비 산정기준 및 관리방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자료와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민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와의 실무 협의회를 정례화해 공사비 산정기준 작성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선정, 분석기준 및 절차를 논의함으로써 공사비 산정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둘째,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다수의 기관이 다양한 공사비 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도록 해 발주기관이 공사특성과 여건에 맞는 공사비 자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소규모 공사에 관한 작업조건 보정기준은 매우 미흡하므로, 실적공사비 단가집과 표준품셈을 1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와 그 미만 소규모 공사로 적용대상을 구분해 별도 발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